

도심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도시 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서울 3도심과 자치구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 준 현**

김 민 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30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도심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이들 간의 경제적 지역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규명하고, 둘째, 이러한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지역별(구도심, 강남권 및 영등포권)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생활수준(소득수준, 소비수준)과 재정력 격차를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통근통행량을 측정되는 경제적 의존도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내생적 성장이론과 신고전파성장이론에 의한 경제성장요인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구도심에 대한 여타 지역의 경제적 의존도는 지역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지역격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대체로 더 커져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중심지 기능의 강화가 서울시의 3도심 체제로의 개편이 다핵중심도시로의 변화 및 자치구들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는 자치구들 간 경제적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경제적 의존도, 지역격차, 서울 도시기본계획

I. 서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에도 서울의 자치구들 간 지역격차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는데, 당시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99%인 반면 강북구는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두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64.3%p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환·서승제, 2009). 따라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는

* 이 논문은 2012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제1저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된 도시 중심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1 도심 및 5 부도심으로 대표되는 다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서울시정백서, 2011)¹⁾. 그러나 정책시행 이후 오히려 강남·북간 불균형적 성장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2007년의 경우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가 1995년 94.0%에서 2007년 84.1%로 9.9%p 감소한 반면,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에 비해 12.7%p 감소한 31.9%를 나타내게 되었다(이규환·서승제, 2009)²⁾. 이렇듯 자치구들 간 경제적 측면의 지역격차 확대는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자치구 간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었다는 비판이 등장하게 되었다(김은래, 2004; 고경곤, 2008).

이러한 서울시 자치구들에서 나타나는 지역격차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울의 구도심 및 강남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직주(職住)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와 이로 인한 자치구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이삼수, 2004; 선권수, 2009; 전명진, 2011).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강남권 및 영등포권 그리고 구도심이 ‘고용 중심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으로 통근하는 서울 시민은 전체 근로자 대비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치구들 간 직주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연구원, 2012).

이렇듯 자치구들에서 나타나는 직주분리 현상은 서울의 중심지 기능이 서울시 자치구들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및 강남권으로 대표되는 특정 자치구들에 입지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직주분리 현상은 장거리 통근자들의 수 및 통근시간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Hitomi et. al.(2000)의 연구와 홍준현·김민곤(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직주분리 심화로 인한 타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따라서 직주분리 현상은 주민들의 복리를 저해하고 지역의 소득 및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는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하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이규환·서승제, 2009; 홍준현·김민곤, 2012).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단핵 위계중심 체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2020 도시기본계획」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체제를 구도심·강남권·영등포권의 3도심 체제로 재편하여 강남권³⁾ 및 영등포권에 중심지 기능 집적을 강화시켜 서울을 다핵중심 도시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서울시정 열람, 2013). 그러나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직주분리 현상 및 지역격차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격차 문제의 원인이 지역들이 각각 독립적이지 않으며, 인접한 지역들 간에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돼

1) 1984년 『도시구조개편을 위한 다핵도시 개발연구』를 토대로 1990년 『2000년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며, 다시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도심(종로·중구) - 5부도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영동(강남권)) 중심으로 분산적 균형개발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2) 서울의 25개 자치구들중 강남지역의 발달된 3개의 자치구는 서초, 강남, 송파를 의미하며 강북지역의 낙후된 3개 자치구는 강북, 도봉, 노원을 의미한다.

3) 여기서 말하는 강남권은 영동개발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서초구와 강남구를 포함한다.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잠실을 포함한 송파구는 강남권과 분리되어 3핵과 별개로 7개의 광역중심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있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van den Berg, 1987; 하성규·김재익, 1992; 김은래·이명훈, 2004; 이승현, 2005; 홍준현·김민곤, 2012). 따라서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중심지 기능의 집적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연 자치구별 자족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다핵도시로의 재편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자족기반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도시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자치구별 자족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서울의 기타 자치구들에 대해서 도시 중심기능을 수행해왔다면 이러한 기능수행이 서울 자치구들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만약 3도심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들이 지금까지 도시중심기능을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로 자치구들간의 지역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장하고 있는 3핵 중심의 개편안이 자치구들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30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도심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이들 간의 경제적 지역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규명하고, 둘째, 이러한 영향이 지역별(구도심, 강남권 및 영등포권)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자치구 간 지역격차의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논의

1. 경제적 의존도의 의미

고전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존재 유무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총수요 중에서 자기지역 생산물의 충족 비율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산물이 많은 경우를 경제적 의존도가 존재한다고 본다(김한수, 2009: 132-133; 홍준현·김민곤, 2012).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의존도의 개념은 산업별 자급도 라는 지표를 통해서 대표성을 갖고 사용되는데, 단순히 이를 가지고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를 설명하기에는 과거에 비해 다원화된 산업구조 및 복잡해진 지역 간 교류 및 교역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홍준현·김민곤, 2012).

따라서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 산업별 자족도 뿐만 아니라 통근 통행과 같이 지역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현상을 보고 논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Hitomi et al., 2000: 524-527). 기본적으로 경제적 의존도는 지역의 자족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경제적 의존도의 유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인적 및 물적 자원 교환이 얼마나 독립적 혹은 의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경제적 의존도와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경제적 현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레온티에프(Leontief)로 대표되는 물적 자원 이동과 교환 그에 따른 승수유발계수를 통한 변화의 모습에

중점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인적 자원 이동을 대표하는 지표의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이동의 목표지역의 명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문희구, 1995; 윤인숙, 1998; 홍준현·김민곤, 2012).

따라서 경제적 의존도를 인적 자원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여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대한 논점을 다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대표적인 연구로 미국의 Hewings(1998)와 Hitomi et. al. (2000)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Hewings(1998)는 시카고 지역에서의 지역 내 인적 및 물적자원의 교역 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의 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Hitomi et. al. (2000)은 일본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의 심화를 인적 및 물적 자원 교류로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역 내 경제요소(고용, 자본,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지해명, 2009).

국내 연구로는 문희구(1995) 및 변미정(2001)에서 경제적 자족도가 높은 도시 및 지역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의 특성을 유추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자족도가 높은 도시들일수록 도시 내부 산업들이 산업별로 고른 비중이 나타나지만, 자족도가 낮은 해당지역이 덜 독립적이거나 다른 지역에 의존된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의 경우 해당 도시 내 산업들이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문희구, 1995: 3-5; 변미정, 2001: 4-6; 송미령, 1997: 210-212).

인적 자원 이동 및 교환을 통해 경제적 의존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지표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통근통행량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근통행은 거주자들이 노동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통근통행을 통해 나타나는 주거지와 직장지의 공간적 관계는 노동을 공급하는 지역과 공급된 노동을 수용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근에 따른 통근통행은 소득을 얻기 위한 정기적인 인적 자원 이동을 대표하며, 정기적으로 지역 내부로의 통근통행이 아니라 지역 간 통근통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역 간 인적 자원 이동 및 교환으로 볼 수 있다(문희구, 1995; 윤인숙, 1998; 홍준현·김민곤, 2012). 그러므로 인적 자원 이동 또는 수요지와 공급지가 다르다는 말은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인적 자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되며, 즉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결국 통근통행을 통한 지역격차를 보겠다는 것은 인적 자원 이동을 통한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지역 간 산업 변화 및 경제규모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결과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궁극적으로 통근통행량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적 자원 이동을 통해 경제적 의존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서울 자치구들간의 경제적 격차를 살펴본다면, 서울시가 2000년대부터 실시한 「균형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인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격차의 관계

경제적 의존도란 지역의 자족성의 측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말이며, 경제적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경제적 특성에서 외부지역으로 일방적인 의존도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의존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자치구들간의 지역내부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간 흐름을 보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Taylor(1970)의 가정인 모든 지역들의 상호연계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폐쇄적 환경에 속한 도시들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Taylor, 1970: 51-54).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정희수(1992)는 캐나다의 퀘벡(Quebec)와 온타리오(Ontario)지역들이 미국의 오대호 및 동부연안(New England)지역에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며, 미국 오대호 연안지역들에 의해 캐나다 지역경제의 발전 및 쇠퇴가 결정되고 있음을 생산요소(1인당 소득, 고용률)을 통해 입증하였다.

Hitomi et. al. (2000)은 일본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1980~1990년의 10년간 지역내부 교역 감소 및 외부지역과 교역의 증가로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 심화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경제승수효과가 낮아지며, 지역 내 경제요소(고용, 자본,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지해명, 2009: 138-141). Akita(1994)에서는 지역 간 교역이론을 통해, 일본의 간토 지역이 도쿄의 대도시권에 경제적 의존도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을 간토지역의 경제성장이 도쿄의 대도시권의 경제요소(소득, 고용)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도쿄의 대도시권의 경제요소들이 간토지방의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서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의존도에 대한 연구는 권용식·김창석(1998)의 경우 서울의 통근패턴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역 자체 통근비율은 감소하고, 오히려 평균 통근거리는 증가하는 직주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삼수(2004)의 경우에도 대도시권의 교차통근증가에 따른 직주불일치가 주요 대도시권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주요 신도시지역의 경우 서울 도심에 대해서 한 장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동현·임업(2010)의 경우도 서울의 도심 및 부도심에 대한 금융, 투자, 지식 산업부분의 고차 중심지 집중화와 이들 지역에 대한 통근통행이 늘어나는 직주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의존도는 교역에 따라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며, 이는 지역 간 교역 비중이 커질수록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타 지역에 이루어지는 생산일 경우 그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는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 간 교역 - 성장 이론에 따르면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교역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두 지역간 경제적 상호 관계성이 높다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이 변화하면 그 지역과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다른 지역은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 변화한 지역에 맞추어 스스로를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2007)의 「지역산업연관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조달비중이 높으며, 이미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이기에 지역 내 경제적 성장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지해명, 2009; 홍준현·김민곤, 2012).

3. 서울시의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의 지역격차 연구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이 시·도 수준이나 그보다 더 큰 광역 수준에서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격차는 시·도 단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내의 자치구들로 대표되는 지역 내 격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자치구간 지역격차의 모습과 지역격차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측면을 재정·생활수준, 인구밀도 및 교육수준 및 문화환경, 중심지의 변화로 설명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재정 및 생활수준의 측면은 신고전과 성장이론에서 경제성장요인이라 여겨지는 외적변수들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주희(2002)는 서울지역의 전반적인 생활격차를 공원, 도로, 통행량, 종사자 등과 같은 외적변수를 대표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강남·강북을 비교에 있어 이들 지표들의 지역격차가 크고 그 원인으로는 다핵도시의 실패, 특정지역위주의 개발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김은래(2004)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들 간에 도시공간특성을 비교하는 과정에 있어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재정적 안정 및 주거환경의 우월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육, 교통, 산업, 문화시설과 같은 외적변수의 지표들이 강남지역에 집중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김은래(2004)의 연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기존의 한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강북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로 대표되는 3개 자치구와 나머지 지역들 간의 지역격차 문제가 심각하며, 3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강북지역과 지역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서승환(2005)의 연구에서도 또한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을 외적변수인 자치구별 세입액, 대기업 종업원수, 인구밀도 등의 변수들을 통해 자치구들 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수준 및 문화환경적 측면에서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요 경제성장이론으로 여기는 내적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 김효화(2006)는 서울 자치구들을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자치구들의 경제, 교육환경, 보건안전, 주거환경의 4개 영역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이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우수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으로 나타났다고 보았으며, 특히 교육환경 및 보건안전과 같은 인적 자원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 교육의 경우는 초등학교까지는 서울시 전체가 고르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이후부터, 보건안전의 경우 의사 및 병원 수에 있어 일부 특정지역들(강남·서초·영등포)에 대한 차별적 성장과 그에 따른 격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승현(2004)은 서울의 25개 자치구들을 재정, 교육, 문화, 정보화 수준 등을 통해 상호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로써 단순히 한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강북간의 차이가 아니라 강남3구와 목동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영등포구와 같은 일부 특정지역들과 그 밖의 다른 자치구들간의 거주민들 간 학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학력의 격차가 지역 간 소득의 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소정(2005)은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여건의 격차와 인구 및 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또한 한강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강남과 강북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자치구들의 차별적인 성장으로 인해 인구 구조 및 교육 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높은 소득을 갖는 거주민들이 특정지역으로의 집중화 및 집 단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중심지의 변화와 이를 통한 도시내 지역격차의 측면에서는 이상대(1996)의 연구에서 서울시를 기능별로 유형화하여, 내부 시가지로 불리는 구시가지 주변지역의 쇠퇴현상 및 원인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의 인구밀도와 인구 전입·전출률 및 개발밀도를 해당 지역들의 경제활동 및 경제활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구시가지 주변지역의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영등포 및 강남·서초와 같은 일부 지역들의 경우는 차별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재원외(2007) 또한 서울시를 공간적 기능으로 분류하는데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의 인구밀도 및 인구이동을 지역격차의 지표로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격차의 발생과 그 특성을 2005년부터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한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존재하지만 중구·서초구·강남구·영등포구로 대표되는 특정 지역들에 차별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부도심 및 지역들은 중심업무기능을 포함한 중심지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다미(2009)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중심지의 형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50개의 중심지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상주인구 및 주간인구의 변화, 주거 및 상업면적의 비중, 산업경제, 공공시설 등의 지표들을 2000년과 2005년간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중심지구들은 현재 3도심이라 불리는 특정지역들(중구·영등포·강남·서초)에 편 중되는 불균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3도심이라 불리는 특정지역들의 중심지기능은 더욱 강화되나 그 밖의 다른 지역들의 경우는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거나 잠식당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역격차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서울시내의 자치구들 간 경제적 측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과거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가 문제였다면, 최근의 경우는 단순히 한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들에 편중된 지역 발전과 성장에 따른 지역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한강을 기준으로 한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격차에 대한 논쟁보다는 특정지역에 경제적으로 의존된 지역들의 경제적 의존성에 따른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및 지역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전적 성장이론에 근거한 외적요인과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하게 된다. 서울시의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연구대상 지역을 두고 고전적 성장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한 개별적인 연구들에서 각각의 이론에 근거한 지표들이 지역격차 현상의 원인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원인이 다양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성장이론 및 내생적 성장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지역격차의 발생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서울시가 지정한 중심지들 중 특정 중심지들에 대해서만 편중적인 지역성장

지 기능의 강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심 및 지역들과의 차별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3도심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들(중구·서초구·강남구·영등포구)을 제외한 다른 부도심 및 지역들은 중심업무기능을 포함한 중심지 기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거나 3도심으로 알려진 특정지역들에 잠식당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들의 중심지 기능의 강화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중심지 기능의 쇠퇴 및 특정지역에 대한 흡수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특정 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의 의존성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 내 중심지 기능의 불균형적인 분포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성장의 모습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역격차의 독특한 특징과 동시에 지역 간 경제적 의존성이 지역 간 지역격차에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틀 및 변수

1) 분석틀 및 가설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 간 경제적 의존성이 자치구들 간 경제적 측면의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의존성 지표 이외에 기존 경제 성장이론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적 의존성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이론은 크게 신고전과 성장이론으로 대표되는 외재적 성장이론과 인적자원 성장이론으로 대표되는 내성적 성장이론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신고전과 성장이론에서 보는 외생적 변수는 경제활동으로 대표되는 생산과 소득과 관련되는 지표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요인을 찾는 방법이며, Domar(1946)의 이론을 지역성장에 응용한 모형이다. 이 이론에서는 도시의 생산성 증대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지역의 성장이 그 지역의 생산요소 증대와 생산 증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 기술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보았으며, 세부적 지표로는 1인당 자본, 기업 규모, 자본, 노동, 인구밀도, 고용밀도, 제조업체 비율 등과 같은 요인들을 상정하였다(이정구, 1996; 이상호·김홍규, 1996: 59-61; 이변승, 2000: 300-309; 유승훈·정군오, 2004: 86-90; 최태림·김의준·박승규, 2004: 112-115; 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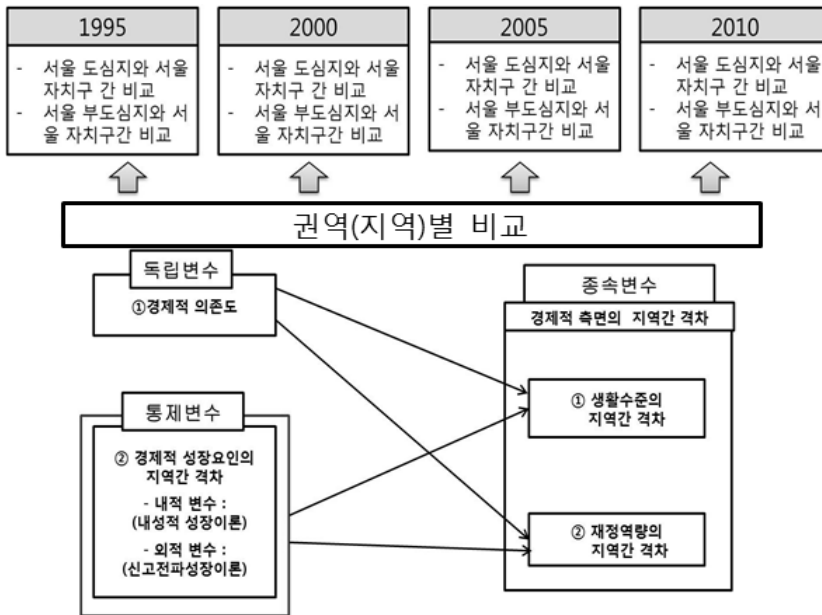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내성적 성장이론은 지역 내 경제성장요인은 인적 자원 같은 내적 특성에 근거해서 찾는 방법이다. 이 이론은 조직이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발전의 과정과 원칙에 더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 이에 조직 내 참여 구성원인 거주민들의 환경 및 교육의 개선을 통한 경제 개발과 발전을 강조하는 발전방식을 의

미한다(Lucas, 1989; Henderson, 1985; 김명수, 1998: 282-294; 심재희, 2003: 202-206).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에 있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지역격차는 지역들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대로 불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지역격차의 고착화와 지역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지역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들 간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의 격차의 심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전명진, 1996: 38-41; 이변송, 2000: 299-302; 이재원, 2007: 79-83).

지역개발정책의 최종적인 정책목적은 지역 내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외재적·내생적 지표에 따른 경제성장이론과 지역의 경제적 격차와의 깊은 관련성은 연구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지역 내 경제성장 지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지표에 대한 대표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분석틀



이상의 분석틀에 따른 본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지역 간 생활수준(소득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1-1) 구도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득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1-2)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

(소득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1-3) 구도심권 및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득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2)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2-1) 구도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2-2)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2-3) 구도심권 및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3)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3-1) 구도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3-2)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가설3-3) 구도심권 및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두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적 측면의 지역격차는 이론에 대한 검토 및 분석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내 경제성장 지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지표에 대한 대표성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수준 및 재정역량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지표로 지역격차를 측정하였다.

첫째, 생활수준은 소득과 소비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기본적으로 생활수준이란 지역경제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수준의 변화는 지역 내 경제의 성장 및 저하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Klosterman, 1985: 136-140). 소득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의 증가 또한 커지기 때문에 지역 내 고소득자가 많을수록 지역 내 경제발전을 활성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지해명, 2009).

지역 내 소비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수요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및 상업의 지역 내 입지가 형성되고 결국 지역 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 내 소득과 소비는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요소들이라 볼 수 있으며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이변송, 2000: 299-302; 유승훈·정군오, 2004: 86-90; 심재희, 2003: 204-205).

지역소득은 1인당 주민세 소득할 액수를 통해 자치구들 간 지역격차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아

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세 소득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민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다음으로 지역소비는 1인당 도소매매출액을 통해 자치구간 지역격차를 측정하였다.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들의 소비수준이 파악되지는 않으나, 소비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내 도소매매출액의 경우 지역 내 이루어진 모든 소비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홍준현·김민곤, 2012: 64-66; 경기개발연구원, 2008: 22-2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14-16).

자치구들 간 재정역량 차원의 지역격차는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을 통해서 지역격차를 측정하였다. 자치구들의 재정역량이란 해당 지자체가 공공수요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27-31). 본 연구에서 재정역량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 총액 중 주민세 소득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액을 인구로 나눈 1인당 지방세액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하였다.⁴⁾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지역 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주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세수액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 및 지역내 산업 및 경제규모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규모의 간접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1인당 지방세입이 증가한다는 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다는 말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고부가가치 산업 또는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해당지역이 높은 수준의 잠재적인 소비수요를 갖으며, 이는 지역 내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기에 지역들 간 경제적 측면의 지역격차를 보는 주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김민곤·홍준현, 2012: 64-66; 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김영수·변창욱, 2006).

둘째, 본 연구에서 서울 자치구들 간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보고자 하는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는 서울 자치구들이 서울 도심 및 부도심 지역에 대한 통근통행 비율로 측정하였다. 통근통행은 인적자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로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의 유무를 알아보는 방법이며 그 산출방식은 해당도시 전체 통근통행량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통근통행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다(Van den, Berg. L, 1987; 변미정, 2001: 8-9). 물론 경제적 의존도라는 것이 지역들 간의 인적 자원의 이동만 아니라 물적 자원의 이동도 포함되나 물적 자원에 대한 측정 지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을 대표하는 통근통행으로만 한정시켰다.

셋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인 경제성장요인은 연구가설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성적 성장요인과 외적 성장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구1,000명당 사설교육기관 수 및 학력수준을 나타내는 고등학교 졸업자수 및 대학교 이상 졸업자수와 같은 인적지표를 내성적 성장요인의 변수로 선택

4) 주민세 소득율은 지방세 총액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미 종속변수 중 생활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에 대한 지표로써 주민세 소득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표들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하였다. 김은래·이명훈(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쳐 소득의 격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저소득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종사산업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보다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경향성이 크다는 것이다(김은래·이명훈, 2004;54-56). 특히 박소정(2005)은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자치구간 교육부문의 격차가 지역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시설이 좋은 자치구일수록 이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집중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고소득자의 집중을 가져오게 되어 자치구별 지역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입증하였다(박소정, 2005; 61-65).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인력의 기반이 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노동가능 인구가 많아질수록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력이므로 지역경제성장요인의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김상호·박시현, 2006: 11-13; 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외적성장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산업 및 상업입지면적비율, 기반고용비율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각자 인구, 산업, 지역의 상대적 우위성을 대표하는 변수들이다. 인구밀도의 경우 인구의 집적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요인의 강화를 의미하며, 1차 산업보다 2차 및 3차와 같은 고차 산업으로 갈수록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산업 및 상업입지면적의 경우도 집적이익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요인의 강화를 의미하며, 지역의 경제적 수요가 높을수록 산업 및 상업입지 면적 또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Cervero, 1995: 506-508; 이상대, 2000). 기반고용비는 전체지역에 대비한 해당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전제로 하는 분석방법이다. 기반고용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 산업의 생산량이 소비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부지역 수요를 또한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내 소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외부 지역으로 소득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산업 고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반고용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외부지역의 수요를 담당함에 따라 그만큼 지역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Klosterman, 1985; Roper & Grimes, 2005: 305-309).

〈표 1〉 변수 구성 및 산출식

영역	부문	내용	지표	산출식
경제적 격차	생활 수준	지역 소득	1인당 주민세 소득할 액수	$\frac{\text{주민세 소득할 총액}}{\text{총인구}}$
		지역 소비	1인당 도·소매매출액	$\frac{\text{도소매 매출액 총액}}{\text{총인구수}}$
	재정력		1인당 지방세 징수액	$\frac{\text{지방세(주민세소득할 제외) 징수액 총액}}{\text{총인구수}}$
경제적 의존도			도심 및 부도심지에 대한 순 통근비율	$\frac{(\text{출발지에서 목표지 도착자수} - \text{목표지에서 출발지도착자수})}{\text{총 통근통행량}}$

경제 성장 요인	내생적 성장지표	인구 1000인당 사설교육기관의 수	$\frac{\text{전체사설교육기관수}}{\text{총인구수}} * 1000$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비율	$\frac{\text{고등학교졸업자수}}{\text{지역총인구}}$
		대학교이상 졸업자 비율	$\frac{\text{대학교졸업자수}}{\text{지역총인구}}$
	외적 성장지표	인구밀도	$\frac{\text{지역총인구}}{\text{행정구역총면적}}$
		산업 및 상업 입지 면적 비율	$\frac{\text{산업 및 상업 면적}}{\text{행정구역총면적}}$
		기반고용비율	$\frac{\text{서울도심및부도심의기반고용비율}}{\text{서울자치구의기반고용비율}}$

주: 각 지표별 데이터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수집하였음

2. 분석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13년에 발표된 「2030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도심에 해당하는 지역들과 서울 자치구 간 통근통행량에 따른 경제적 의존도가 자치구 간 경제적 지역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첫 번째로 3도심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에 대한 나머지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의 유무를 측정하고, 두 번째로 서울이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정책목표인 자치구들간의 균등발전 달성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구도심지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나머지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에 따른 지역격차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로 구분하여 살펴 분석하였다. 자치구들은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역과 그 외 자치구 지역 이렇게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구도심은 종로구 및 중구를 의미하고 강남권 및 영등포권은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그 외 자치구들은 앞서 언급한 이들 자치구들을 제외한 나머지로 구분하였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1 도심지 5 부도심지로 대표되는 다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5개 부도심중 강남권으로 대표되는 서초구, 강남구와 여의도 금융업무지구로 대표되는 영등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차별적인 지역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과도한 구역 지정이었다는 비판이 나타났다(맹다미, 2009:10-13). 따라서 부도심지역들 중 기존에 비해 차별적인 지역경제성장이 나타난 강남권 및 영등포권역에 해당되는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인데, 이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전과 후에 따른 권역별 변화도 함께 볼 수 있다.

3. 분석방법

1) 지역격차의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지역격차는 변이계수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나머지 서울 자치구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따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측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의 측면에서 측정하였다(이상엽, 1995; 박중화, 1998; 홍준현·문동진, 2008; 김민곤·홍준현, 2012) 따라서 서울 구도심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존재하는 서울 자치구 [A]라고 정의할 경우 구도심지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역과 [A] 간의 지역 격차는 다음 (식 1)과 같이 구해지게 된다.

$$\text{지역격차} = \frac{\text{서울 구도심권 or 강남권 및 영등포권역}}{A(\text{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quad (\text{식 1})$$

따라서 서울 구도심권에 대한 지역격차의 측정은 구도심권에 해당하는 중구, 종로구에 대한 강남권 및 영등포권을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20개 자치구들의 지역격차를 측정하였고,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지역격차의 측정에는 이와 반대로 서울 구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서울 자치구들과의 지역격차를 비교하여 지역격차를 측정하였다.⁵⁾

2) 경제적 의존도의 측정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의존도에 대한 측정 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 조사 결과 중 지역별 통근에 따른 통행량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각 지역별 통근자수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한 것이며, 지역의 내·외부 통근자수를 파악하여 외부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경제적 의존도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서울 자치구[A]의 총 통근통행량 중 서울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역의 통근통행량의 비율로 측정된다. 그러나 역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순수한 경제적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역에서 서울 자치구[A]로의 통근통행량을 차감할 필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정리해보자면 출발지인 서울 자치구[A]에서 목표지인 서울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총 통근통행자수에서 서울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서 서울 자치구[A]로의 통근통행자수를 빼는 방식으로 순수한 경제적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frac{\text{출발지에서 목표지 도착자수} - \text{목표지에서 출발지 도착자수}}{\text{출발지의 총 통근통행량}} \quad (\text{식 2})$$

5) 서울 구도심권(종로구, 중구)에 대한 강남권 및 영등포권을 제외한 서울 나머지 20개 자치구들에 대한 지역격차는 따라서 N=40이 되며, 이와 반대로 강남권 및 영등포권(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에 대한 서울 구도심을 제외한 서울 나머지 20개 자치구들에 대한 지역격차는 N=60개가 된다.

3) 입지상(Location Quotient) 분석을 통한 기반고용비율의 측정

당해 산업에서의 기반부문생산 활동 측정은 다음 (식 3)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산업에서의 비 기반부문생산 활동의 총고용에서 가정되는 기반부문 생산활동을 차감함으로써 얻어진다. 단, 아래 (식 3)은 LQ(Location Quotient) 값이 1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 식을 LQ 값이 1보다 작은 산업에 적용하면 마이너스 값이 도출되는데, 이는 실제 마이너스 고용이 없으므로 계산상의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LQ 값이 1보다 작으면 기반부문 생산 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Klosterman, 1985: 134-137).

$$b_i^t = \left(\frac{e_i^t}{E_i^t} - \frac{e_T^t}{E_T^t} \right) \times E_i^t \tag{식 3}$$

여기에서 b_i^t 는 t 시점에서 i 산업의 지역 내 기반고용을 의미하고,
 e_i^t t 시점에서 I 산업의 지역 내 고용을 의미하고, e_T^t 는 t 시점에서 지역 내 총고용을 의미하고,
 E_i^t : t 시점에서 I 산업의 전국 고용을 의미하고, E_T^t : t 시점에서 전국 총고용을 의미함

이러한 입지 상 모형을 통한 기반고용 부문의 추정은 그 가정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소비와 관련된 것으로 지역 내 고용 당 소비성향이 전국적인 소비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괄호 안의 우측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일 특정 산업에 대한 지역 내 소비성향이 전국의 소비성향보다 크다면 위 식에서와 같이 단지 전국 고용 중 지역 내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역 내 소비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지역 내 소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기반고용비율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인구비율이나 개인소득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읍·면 단위로 개인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생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식과 같이 인구비율로 보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Klosterman, 1990; Norcliffe, 1983: 163-166; Forward, 1982).

$$b_i^t = \left(\frac{e_i^t}{E_i^t} - \frac{p^t}{P^t} \right) \times E_i^t \tag{식 4}$$

여기에서, p^t 는 t시점에서 지역 내 인구를 의미하고, P^t 는 t시점에서 전국 인구를 의미함.

이와 같이 기반고용의 양이 계산되면 기반고용비율은 지역의 전체 고용 중 기반고용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기반고용비율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반고용비율이 큰 지역은 전국대비 지역인구의 비중이 고용비중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 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소비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산업이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의 수요 또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두 번째로 기반고용비가 작다는 것은 고용비중이 낮다는 말이며, 이는 지역 내 산업규모가 지역 내 소비규모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

당지역은 다른 지역에 수요를 흡수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민곤·홍준현, 2012: 64-66; 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4)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경제적 의존도 효과의 측정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독립변수로서의 경제적 의존도가 종속변수로서의 경제적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외생적 요인에 있어서의 격차를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OLS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VIF 값을 확인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모델들에서 그 값이 2이하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도에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와 생활수준(소득수준) 격차와의 관계

먼저 구도심지와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소득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도심지에 대한 나머지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소득수준의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강남권 및 영등포권과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경우, 경제적 의존도가 소득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도(β)가 모든 연도에서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는 지역에 대한 통근통행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따라서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는 이들 지역의 중심지 위상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기간 동안 구도심과 서울 자치구들간의 경제적 의존도의 변화를 비교해볼 때 구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도시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이 도심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구도심의 과밀화는 억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반대로 강남권 및 영등포권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선권수, 2009).

통제변수로 사용된 지역경제성장요인 중 내적성장요인에 해당되는 교육여건(인구당 사설학원 수) 및 학력수준(고졸자, 대졸자 비율)에 있어서는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 간의 비교 및 차이점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외생적 성장요인 중 산업 및 상업입지면적비율의 경우는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상업입지 면적비율은 집적이익에 따른

효과를 전제하며 강남권역 및 영등포권의 경우 시간에 흐름에 따른 상대적 영향력이 구도심에 비해 증가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 지역에 중심지기능 집적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반고용비율은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해서만 1995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 성장요인들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구도심지에 대한 내적성장요인의 지표들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구도심지역에 내적성장요인들이 지역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외생적 성장요인에 따른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상이한 지역경제성장의 모습이다. 먼저 산업 및 상업입지 면적비율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 모두에서 경제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심지 기능의 집적과 그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중심지 기능의 집적은 해당지역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자치구들중 강남권 및 영등포권은 강남권의 경우 영등부도심으로 통칭되어 광범위한 중심업무기능이 발달하였으며, 영등포권의 경우 여의도업무지구로 통칭되어 중심업무기능이 발달하였다(이규환·서승재, 2009). 따라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있어서도 집적이익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고 상대적 영향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중심지 위상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맹다미, 2009).

그리고 기반고용비율의 격차가 두 집단 모두에게 지역 내 경제성장의 주요한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Christaller(1932)가 주장한 중심지의 성장이 배후지역의 종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심지인 이들 지역으로 집중되는 특징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했던 5부심은 구도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다핵구조로 개편을 위해 고용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었다. 따라서 기반고용비율이 구도심은 물론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있어서도 1995년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지역 소득수준차원에서 볼 경우 이들 지역들이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은 이루어졌으나 경제기반이론에서 목표하는 주변지역으로의 경제성장의 파급효과라는 목표 달성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선권수, 2009).⁶⁾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설1-1) “구 도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득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와 반대로 (가설1-2)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득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와 (가설1-3) “구 도심권 및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생활수준(소득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6) 더욱이 지난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서울시 직주비율 변화 조사에서도 다른 부도심들이 청량리·왕십리(0.99→0.85), 상암·수색(0.89→0.83)으로 감소한 것과는 달리 강남권은(2.38→2.71), 영등포권은(1.36→1.41)로 증가하는 모습에서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5부도심 중에서도 차별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표 2〉 서울 구도심지역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소득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0)

도심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87.916		-.018	-8049.800		-2.045	-1922.451		-.929	3869.968		.328
통근통행	-48.232	-.119	-.762	-77.072	-.125	-.878	55.288	.075	.600	-38.390	-.020	-.138
사설학원	-10.766	-.309	-2.005*	-16.729	-.552	-4.182**	-13.906	-.451	-3.029*	-1.898	-.030	-.210
고교졸업자	13.685	.039	.286	114.888	.489	2.183*	35.551	.231	1.366	-109.735	-.189	-.714
인구밀도	12.028	.277	1.784	13.773	.338	2.568*	6.612	.112	.680	62.026	.471	3.121*
산업면적비율	.333	.339	1.950	.365	.372	2.868*	.405	.309	2.228*	1.435	.469	3.144*
기반고용	.084	.316	1.790	.009	.038	.295	.016	.125	.961	.001	.012	.094
대학졸업자	.900	.027	.140	-2.532	-.046	-.204	11.309	.256	1.506	46.423	.469	1.748
R	0.749			0.793			0.793			0.757		
R ² (adj R ²)	0.560(0.464)			0.628(0.547)			0.629(0.548)			0.573(0.479)		
F	5.826**			7.726**			7.764**			6.127**		

* p<0.05 , ** p<0.01

〈표 3〉 서울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소득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60)

도심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979.734		-1.796	-2187.657		-2.792	90.646		.147	5300.321		3.459
통근통행	22.318	.217	2.032*	41.257	.375	3.443**	51.098	.359	3.241*	102.648	.305	3.254*
사설학원	-.165	-.039	-.299	-2.616	-.662	-3.813**	.297	.063	.403	3.802	.584	4.140**
고교졸업자	21.681	.248	2.075*	24.401	.873	2.763*	-3.371	-.070	-.464	-76.726	-1.072	-4.415**
인구밀도	-.467	-.045	-.367	2.539	.251	2.001*	.872	.065	.512	2.919	.102	.978
산업면적비율	.013	.054	.395	.080	.355	2.487*	.086	.305	2.360*	.141	.228	2.028*
기반고용	.048	.447	3.747**	.011	.116	1.062	.009	.200	1.833	.004	.115	1.381
대학졸업자	.782	.203	1.197	.998	.152	.568	3.454	.607	3.158*	14.429	1.152	6.148**
R	0.685			0.657			0.694			0.823		
R ² (adj R ²)	0.469(0.398)			0.432(0.356)			0.482(0.412)			0.677(0.634)		
F	6.573**			5.653**			6.916**			15.573**		

* p<0.05 , ** p<0.01

2.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와 생활수준(소비수준) 격차와의 관계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소비수준의 격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소비수준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도심과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경우 소비수준 또한 경제

적 의존도가 지역 간 격차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강남권역 및 영등포권의 경우 소비수준이 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강남권 및 영등포권과 서울 자치구들의 경우 회귀모델의 상대적 중요도(β) 값이 1995년 0.278에서 2000년 0.314, 2005년 0.328, 2010년 0.15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는 지역 간 통근통행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소비수준은 지역 내 소비의 규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의존도가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이들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경제활동에 의한 소비보다 지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제활동에 의한 소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지역경제성장요인 중 내적성장요인에 대해서는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외생적 성장요인 중 산업 및 상업입지 면적비율은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집적이익에 따른 효과를 전제하며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 이들 지역에 중심지기능 집적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반고용비율은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사용된 지역 내 도·소매 매출액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구도심지에 대한 내적성장요인의 지표들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구도심지역에 내적성장요인들이 지역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생적 성장요인에 따른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상이한 지역 경제성장의 모습이다. 먼저 산업 및 상업입지 면적비율은 구도심과 강남권 및 영등포권 모두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지역 간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에서와 동일한 모습이며, 강남권 및 영등포역의 중심지 기능의 집적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맹다미, 2009; 선권수, 2009).⁷⁾

따라서, (가설2-1) “구 도심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가설2-2)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와 가설(2-3) “구도심권 및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두 지역 간 생활수준(소비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7) 기본적으로 Christaller(1932)에 따르면 중심지는 배후지역에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중심지는 배후지역의 중심지역활의 수행에 따른 결과로 주변지역의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아 중심지로서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지금까지 중심지는 구도심이었고 그에 따른 배후지역은 나머지 서울 자치구들이었다.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기간 동안 구도심에 비해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소비수준의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기반고용비율 또한 소비수준의 지역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분석결과는 서울의 구 도심권에 비해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서울의 중심지로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 서울 구도심지역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소비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0)

도심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993.081		.406	-9180.710		-1.395	-1628.601		-.585	10430.330		.688
통근통행	74.136	.121	.778	189.416	.183	1.290	196.821	.202	1.587	369.342	.157	1.030
사설학원	-24.120	-.457	-2.985*	-8.891	-.175	-1.328	-14.620	-.357	-2.365*	7.414	.098	.637
고교졸업자	-23.917	-.045	-.332	123.169	.313	1.399	32.771	.160	.935	-168.076	-.241	-.850
인구밀도	25.191	.384	2.483*	-.370	-.005	-.041	5.237	.067	.400	33.530	.212	1.312
산업면적비율	.318	.214	1.237	.855	.522	4.020*	.644	.370	2.631*	1.814	.494	3.091*
기반고용	.091	.226	1.288	.106	.259	2.013*	.022	.133	1.009	.012	.086	.644
대학졸업자	13.841	.273	1.429	-3.252	-.035	-.157	11.466	.196	1.134	33.707	.284	.987
R	0.752			0.793			0.787			0.714		
R ² (adj R ²)	0.565(0.470)			0.629(0.548)			0.619(0.536)			0.510(0.402)		
F	5.942**			7.754**			7.437**			4.751**		

* p<0.05 , ** p<0.01

〈표 5〉 서울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소비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60)

도심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479.174		-.933	-3102.188		-2.249	-326.342		-.417	4760.121		3.730
통근통행	44.413	.278	2.812*	68.291	.314	3.237*	55.192	.328	2.752*	35.931	.152	1.368*
사설학원	-2.135	-.327	-2.678*	-.176	-.022	-.146	.326	.058	.347	3.742	.818	4.894**
고교졸업자	12.857	.095	.855	31.879	.577	2.051*	1.626	.029	.176	-55.579	-1.105	-3.840**
인구밀도	5.913	.371	3.230*	2.045	.102	.916	2.430	.153	1.122	-3.260	-.162	-1.311
산업면적비율	.093	.245	1.941	.191	.426	3.354**	.156	.471	3.384**	.137	.315	2.368*
기반고용	.053	.319	2.878*	.078	.430	4.412**	.012	.231	1.977*	.005	.217	2.193*
대학졸업자	3.197	.536	3.402**	-1.131	-.087	-.365	2.035	.302	1.462	6.570	.747	3.362**
R	0.737			0.742			0.634			0.739		
R ² (adj R ²)	0.544(0.482)			0.550(0.489)			0.402(0.321)			0.546(0.485)		
F	8.846**			9.082**			4.990**			8.941**		

* p<0.05 , ** p<0.01

3.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와 재정력의 격차와의 관계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재정력 측면의 지역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요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면 재정력의 지역 간 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남권 및 영등포권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경우 지역 간 경제적 의존도가 재정력의 지역 간 격차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상대적 영향력(β)은 1995년 0.339, 2000년 0.344, 2005년 0.319, 2010년 0.333으로 측정되었지만, 구도심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적 성장요인의 경우, 구도심에는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남권 및 영등포권은 대학졸업자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도심과의 차별성이 나타났다. 외생적 성장요인에서는 구도심의 경우 산업 및 상업의 입지면적비율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경우는 2000년, 2005년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반고용의 경우 지역 간 소비수준의 격차분석과 유사하게 구도심을 제외한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의 격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의존도는 재정력의 격차에 있어서도 구도심보다는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의존도가 재정력 격차의 지표인 지방세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경제적 의존도가 강남권 및 영등포권과 나머지 자치구들간의 차별적인 지역경제성장의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도심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경제적 의존도가 결국 해당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들의 의존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도심에 비해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나머지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성 즉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지역소득차원에 따른 영향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추진한 자치구간 균형발전 정책이 도심의 과밀화는 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나머지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선권수, 2009).⁸⁾

기본적으로 재정력 차원의 종속변수인 지방세 징수액은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원이 지방에서 전적으로 나오게 되며, 지방세입의 증가는 지역주민 소득수준 및 산업 및 경제발전의 활성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지형·홍준현, 2007: 169-171). 산업 및 경제발전의 활성화는 총량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나 부가가치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직주불일치현상의 결과로 고차중심지기능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금융 및 투자, 지식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이삼수, 2004; 선권수, 2009; 동현·임업, 2010; 전명진, 2011).⁹⁾

8) 기본적으로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는 지역 간 통근통행량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지역 간 경제활동이 외부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외부에 의존적임을 말한다. 또한 지역의 내생적·외생적 성장요인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적 지표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경제적 의존도에 따른 영향력의 증대가 커지고 있다는 말은 서울 자치구들의 지역경제가 외부에 보다 의존적인 자족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외부 독립성이 낮아지는 Upas tree(유포스 나무) 효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Roper & Grimes, 2005: 23-24; Portnov & Erell, 2001).

9)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잠재수요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지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요를 담당하는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 지난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서울시 직주비율 변화 조사에서 강남권은(2.38~2.71), 영등포권은(1.36~1.41)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지역 내 수요를 초과하여 외부지역의 수요를

따라서, (가설3-1) “구도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와 반대로 (가설3-2)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질수록 두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와 (가설3-3) “구도심권 및 강남·영등포권에 대한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두 지역 간 재정력 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6〉 서울 구도심지역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0)

도심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805.243		1.563	-568.920		-.425	-709.108		-1.448	679.723		.396
통근통행	28.567	.243	1.912	26.013	.094	.871	18.789	.088	.862	-16.495	-.056	-.406
사설학원	-3.886	-.385	-3.066*	-6.141	-.455	-4.512**	-3.219	-.360	-2.961*	-1.281	-.136	-.971
고교졸업자	-14.339	-.141	-1.270	8.746	.083	.489	15.186	.340	2.464*	-8.532	-.099	-.381
인구밀도	3.468	.276	2.179*	5.962	.328	3.267*	.334	.020	.145	8.933	.457	3.086*
산업면적비율	.135	.476	3.358*	.217	.497	5.018**	.155	.409	3.607**	.229	.503	3.446*
기반고용	-.006	-.081	-.564	.009	.081	.820	.004	.113	1.061	-.002	-.094	-.767
대학졸업자	.850	.088	.559	5.619	.229	1.332	1.376	.108	.774	3.640	.248	.941
R	0.841			0.885			0.868			0.768		
R ² (adj R ²)	0.708(0.644)			0.784(0.736)			0.753(0.699)			0.590(0.501)		
F	11.075**			16.552**			13.938**			6.585**		

* p<0.05 , ** p<0.01

〈표 7〉 서울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60)

도심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54.771		-.136	-281.977		-.968	8.335		.037	859.273		2.476
통근통행	14.916	.339	3.704**	18.225	.344	4.090**	20.980	.319	3.621**	24.608	.333	3.444**
사설학원	.782	.435	3.849**	-.087	-.045	-.339	.809	.369	2.983*	.904	.633	4.349**
고교졸업자	1.260	.034	.329	3.074	.228	.936	.726	.033	.272	-9.526	-.606	-2.420*
인구밀도	-.098	-.022	-.210	.502	.103	1.063	-1.215	-.196	-1.942	-.957	-.152	-1.415
산업면적비율	.013	.122	1.047	.047	.431	3.917**	.031	.239	2.323*	.017	.127	1.100
기반고용	.012	.256	2.496*	.019	.435	5.160**	.005	.225	2.595*	.000	.062	.721
대학졸업자	.526	.320	2.195*	1.290	.408	1.972*	.853	.324	2.121*	1.820	.663	3.424**
R	0.781			0.814			0.820			0.810		
R ² (adj R ²)	0.609(0.557)			0.662(0.616)			0.673(0.629)			0.656(0.609)		
F	11.580**			14.548**			15.265**			14.151**		

* p<0.05 , ** p<0.01

담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남권역 및 영등포권의 경우 지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의 수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서울시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에 따른 지역격차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구도심의 경우 경제적 의존도가 지역격차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남권 및 영등포권의 경우 경제적 의존도가 생활수준(소득수준 및 소비수준)과 재정역량 측면에 공통적으로 지역격차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볼 경우 Christaller(1932)의 중심지 기능강화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흡수에 의한 현상이며, 지역들의 경제성장이 내생적 및 외생적 경제성장 요인들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족성이 확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일기간동안 구도심에 비해 강남권 및 영등포권이 중심지기능 강화가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이 추진한 자치구간 균형발전 정책이 도심의 과밀화는 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나머지 자치구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서울 자치구들의 경제가 흡수되어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선권수, 2009).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서울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권 및 영등포권에 대한 중심지 기능의 강화가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주장한 3도심 체제로의 개편이 다핵중심도시로의 변화 및 자치구들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는 자치구들 간 경제적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강남권 및 영등포권을 도심으로 부상시키고 중심지기능을 강화시켜 3핵 중심으로 재편하기 보다는 자치구들간의 직주분리 완화를 위해 직주의 근접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점에 소규모 중심지를 도입하는 방안이나(이규환·서승제, 2009; 맹다미, 2009), 구도심 및 강남권 및 영등포권과 같은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구와 이들 지역에 의존하는 자치구들간의 격차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의 강화를 통한 차등적인 교부금 및 재정정보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윤병국, 2012).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8). 「경기도 경기관련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
- 고경근. (2008).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서울시 중심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식·김창석. (1998). 서울 대도시권의 통근패턴 변화. 「국토계획」, 33(5): 183-197.
- 김명수. (1998). 공공투자과 지역경제성장. 「경제학연구」, 46(3): 279-295.
- 김은래·이명훈. (2004). 서울시의 지역 간 도시공간특성에 관한연구. 「국토계획」, 39(5): 53-62.

- 김영수·변창욱. (2006).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김상호·박시현. (2006). 한국 시·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1): 1-24.
- 김효화. (2005). 서울시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지리교육논집」, 49: 81-94.
- 맹다미. (2010). 「서울시 중심지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중심의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70): 2-150.
- 문희구. (1995). 「수도권 신도시 자족도에 관한 연구: 안산·과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소정. (2005). 「교육여건, 인구구조, 주택특성 간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미정. (2001). 「출근목적 통행량을 이용한 지역 간 경제적 의존성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울시. (1995~2010). 「서울 통계연보」.
- 서울시. (1995~2010). 「서울 지방세 연보」.
- 성준용. (2004). 오늘날에 있어서 중심지 이론의 역할. 「국토지리학회지」, 38(3): 273-291.
- 송미령. (1997). 서울 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징. 「국토계획」, 32(4): 209-228.
- 심재희. (200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적자본의 지역성장효과 분석. 「국토계획」, 38(7): 201-209.
- 유승훈·정군오. (2004). 전력소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17(1): 81-94.
- 윤병국. (2012). 「서울지역 자치구간 생활환경 격차변화와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숙. (1998). 「서울시 통근자의 직주불일치에 관한 실증적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규환·서승제. (2009).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357-381.
- 이변송. (2000). 도시권 시, 군, 구의 제조업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48(4): 291-322.
- 이삼수. (2004). 직주재배치를 통한 서울대도시권 통근통행의 효율성 분석. 「국토계획」, 39(3): 95-109.
- 이상대·최상철. (1996). 서울시 내부기성시가지의 시가지특성과 도시계획적 과제. 「국토계획」, 31(6): 9-23.
- 이상대. (2000). 「수도권의 지역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호·김홍규. (1996). 도시별 집적경제효과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1): 55-70.
- 이승현. (2005).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형·선권수. (2009). 토지이용밀도 및 주거유형별 분포에 따른 서울시 중심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2): 253-279.
- 이주희. (2002).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전략(下). 「도시문제」, 37(6): 93-105.
- 이재원·이우중. (2007).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 특성분석 연구. 「국토계획」, 42(5): 81-94.

- 전명진. (1997). 서울 도시권 도시공간구조변화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6): 225-238.
- 지해명. (2009). 지역 간 교역의 추정: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추론. 「경제학연구」, 57(4): 135-163.
- 최태림·김의준·박승규. (2004). 지역경제성장의 공간연계성 분석. 「국토계획」, 39(3): 111-118.
- 통계청. (1995~2010). 「인구총조사. 인구/교육정도 시군구별 현황」.
- 통계청. (1995~2010). 「인구총조사. 현거주지/통근통행목적지 시군구별 현황」.
- 통계청. (1995~2010). 「전국사업체 조사.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 현황」.
- 통계청. (1995~2010). 「지방재정 조사. 시군구별 세목분류별 현황」.
- 하성규·김제익. (1992). 주거지와 직장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27(1): 51-71.
- 홍준현. (2005). 시·군 통합이 지역 내 지역 간 균형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299-324.
- 홍준현·김민곤. (2012)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격차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 55-82.
- 홍준현·박지형. (2007). 시·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167-197.
- van den Berg, L. (1987). *Urban Systems in a Dynamic Society*. Aldershot: Avebury.
- Cevero, R. (1995). Jobs-Housing Balance Revisited.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4): 492 -511.
- Domar, Evsey D. (1946). Capital Expansion, Rate of Growth, and Employment. *The Economics Society*. 14(2): 137-147.
- Henderson, J. Vernon. (1985). *Economic Theory and the Cities*. Orlando: Academic Press.
- Hewings, J., M. Sonis and Schindler, R. (1998). The Hollowing-out Process in the Chicago Economy. *Geographical Analysis*. 30: 217-233.
- Hitomi, K., Y. Okuyama, J. Hewings and Sonis, M. (2000). The Role of Interregional Trade in Generating Change in the Regional Economics of Japan, 1980-1990. *Economic Systems Research*. 12(4): 515-537.
- Klosterman, Richard E. (1990). *Community Analysis and Planning Techniques*. Savage, MD: Rowman & Littlefield.
- Lucas, R. E. (1989).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Norcliffe, G. B. (1983). Using Location Quoti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Base and Trade Flows. *Regional Studies*. 17(3): 161-168.
- Portnov, Boris A. and Erell, E. (2001). *Urban Clustering: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Location*. Aldershot: Ashgate.
- Stephen, Roper and Seamus, Grimes. (2005). Wireless Valley, Silicon Wadi and Digital Island—Helsinki, Tel Aviv and Dublin and the ICT Global Production Network. *Geoforum*. 36(3):

297-313.

Taylor, M. J. (1970). Location Decisions and Small Firm. *RASrea*. 2(1): 51-54.

홍준현(洪準賢):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1995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정부간 관계, 도시 및 지역분석 등이며, 주요 저서로 「다산의 행정개혁: 현대적 해석과 평가」(공저, 대영문화사, 2010)가 있고,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축제품질 인식이 지방정부-시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진주 대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공저, 2014),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3), “교육감 선출제도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공저, 2013) 등이 있다. 현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차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jhhong@cau.ac.kr).

김민곤(金民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2011년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역분석이며, 논문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공저, 2012), “경제적 의존도와 지역격차의 관계”(공저, 2012)가 있다. (noblenight@naver.com)

Abstract

Impacts of Economic Dependency on Intra-urban Economic Disparity: The Relations between Three City Centers and Other Districts in Seoul

Hong, Jun Hyun

Kim, Min G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irst, what impacts economic dependency of districts in Seoul on city center areas did on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and second, how these impact have changed over time and by areas (old city center and new city centers). For this analyses, this study employs living standards (income and consumption) and fiscal capacity as dependent variables, economic dependency measured by commuting ratio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various economic growth factors based on indigenous growth theory and neoclassical growth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economic dependency on old city center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regional disparity, while economic dependency on new city centers did have very strong influence on regional disparity and its influence has been increased. These results imply that transforming to multi city center system in Seoul does not benefit to the balanced growth among districts, rather it could worsen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among districts.

Key Words: Economic Dependency, Regional Disparity, Seoul City Master Plan

